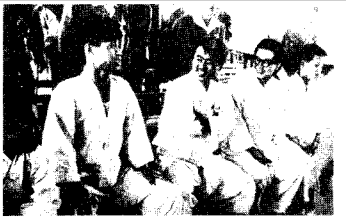
역사가 불붙일 시대의 '암장'

특집 — 故 이수병동문 18주기 추모식을 맞으면서



이수병선생! 그는 우리 삶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인가? 이에 대한 답은 그가 가졌던 꿈은 무엇이고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봄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1936년 12월 3일(음력) 경남 의령군 부림면 손오리 구산부락의 가난한 농가에서..부친 이정항씨와 모친 황정분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장난끼 심하고, 한편 옳다고 생각하면 밤을 굶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든 고집스러웠던 어린시절의 부림공립국민학교 졸업 후 선생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50년 3월 신반중학교에 입학했다.

후일 청년기와 옥중생활시절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그의 학구열 때문에 시골출신으로서는 드물게 4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던 부산사범학교 시절은 빈곤과 우정 두마디로 요약되는 생활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국제시장 청소장비원, 신문배달, 국민학생 가정교사, 심지어 불빨대위에 아이스케키통을 매면서 학비를 조달했던 선생은 한편으로 중학교때의 사회과학서적 탐독이 가져다 준 현실인식으로 하여 사회의 부조리가 목도될 때마다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염려되어 그 미래를 그려보는 일로 가슴과 머리를 채워 나갔다. 사범 2학년에 재학중이던 54년, 선생은 앞으로 그의 사상적 지향을 가늠하게 될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된다. 이른바 '암장(마그마)' 그룹의 태동. 처음 부산고등학교와 부산사범학교의 선진적 엘리트 10여명으로 시작된 '암장'은 '밝스레닌선집' '스탈린 선집' '토이치 이데올로기' '반뮤링론' '공산당사' 등 당시의 엄중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폭과 깊이의 사회과학 이론서와 월북작가, 역사학자들의 금서를 섭렵하며 더없이 소중한 동지적 결합과, 인간적 우애를 맺어나갔다.

56년 3월 사범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동년 4월 부산대 교육학과에 입학 1년간 수료하고, 57년 의령군 산곡의 갑음국민학교에서 1년간 교직생활을 했다.

59년 교직을 그만두고 본교 경제학과 2학년에 편입한 선생은 5·16후 '전국민족통일학생연합'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여전히 긍핍하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대학인의 한 표상인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구현하는 삶을 살았다.

실제로 그는 마음에 드는 책은 10회 이상 반복해서 보았고, '선데이서울'같은 잡지나 삼류소설까지 읽었다.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식의 흐름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대중문화를 적절 접해보아야 하며, 또 그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촌음을 아끼는 그의 습성은 대학생활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자취방에 붙어 있던 생활수칙의 첫번째가 '목적없이 10분이상 앉아 있는 자는 자진 퇴실할 것'이었다고 한다.

한편 선생은 3학년 재학 중 4·19를 맞아 적극적으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는데 60년 11월 '경희대 민족통일연구회'결성을 시작으로 각 대학 민통련과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통민청(통일민주청년동맹), 민민청(민족민주청년동맹) 등의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들을 논의하며, 61년 5월 13일 민자통이 주최한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학생대표 연사로 참가하고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61년 5월16일 군사 쿠데타로 나라 이를 타고 흐르는 '기'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나 눈으로는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혁식도 물증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70년대의 상황에 걸맞는 조직방식이었다. 불문(불평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불명(기구, 개인명칭을 쓰지 않는다) 등 '3불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던 이 조직에서 최고 수준의 이론가로 꼽히던 선생은 학원과 문화부문을 전담했으며, 교양교육을 담당했다.

72년 10월 박정권은 유신을 목적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1년동안 혹독한 고문과 협박으로 점철된 수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인혁당을 재건하여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기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직명칭도 처음에는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는 지하써클이서 인혁당 비슷한 지하서클로, 나중에는 인혁당 재건위로 발전해 갔다.

유신 광기가 만든 '사법사상 암흑의 날'
죽음과 바꾼 민주·자주통일 뜻 기려야

선생은 첫번째 구속이 되는데, 혁명검찰부에 의해 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69년 4월17일 김형으로 출소할 때까지 7년을 영어의 몸으로 있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의 광기가 점점 심해지던 시절이다. 선생은 4월 혁명이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군부세력에 무너지고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민중역량을 혁명에너지로 전화시켜 올바르게 이끌어갈 조직역량, 특히 지도핵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적 활동가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71년 9월 선생을 비롯한 5명을 중심으로 '경락연구회'가 만들어졌다. 경락은 신체의 신경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온 몸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뿐 아강행, 영구집권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73년말 10월의 서울대 문리대 시위를 시발로 12월 재야의 유신헌법개정 1백만인 서명운동과 74년 3월 전국적인 학생투쟁조직과 범국민적 연대투쟁기구조직을 위한 '반독재 구국투쟁 준비위원회' 발족, 4월3일 전국적 시위 준비 등으로 반유신 민주화 투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가자 박정권은 긴급조치 1·2·3·4호 선포, 학생운동지도부(민청학련)에 대한 유사 이래 최대의 수배, 검거작전을 펴 거사일인 4월3일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2백53명을 구속하고 이 중 1백80여명을 기소했다.

민청학련 검거선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선생에게도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통일전선을 지도할 핵심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선생은 74년 4월18일 민청학련 상층부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1년동안 혹독한 고문과 협박으로 점철된 수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인혁당을 재건하여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기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직명칭도 처음에는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는 지하써클이서 인혁당 비슷한 지하서클로, 나중에는 인혁당 재건위로 발전해 갔다.

그리고 그날, 국제법학지협회가 '사법사상 최악의 날'이라 부르는 1975년 4월9일 새벽, 상고기각 20여시간만에 사건관련자 일곱 분과 함께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당하셨다. 유언조차 조작된 채로 인수된 선생의 시신은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손톱, 발톱부분과 발굴공처 전기고문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었다.

이제 선생은 고향 의령군 부림면 구산부락의 뒷산에 비석도 없이 모셔져 조용히 안식을 취하고 계신다.

유신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취급되어 일체의 진상규명이 금기시 되어 왔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언급이, 80년대 중반들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작년에 펭전 "암장" 발간을 통해 어느정도는 사건에 대한 접근과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 밝혀진 부분이 있으나 진실한 접근은 아직도 그 시기가 이르다는 많은 중언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역으로, 아직도 이 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이 불행한 상태임을 역설한다.

이제 4월8일 선생의 18주기 추모제이다. 범혁운동의 앞길에 커다란 디딤돌로 놓여있는 선생의 삶을 추도함은 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온폐된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올바르게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선생이 삶과 죽음으로 염원했던 민주와 정통성을 올바르게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선생이 삶과 죽음으로 염원했던 민주와 자주통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에 평생을 통해 중단없이 실천하고 죽음마저 기꺼이 안았던 선생의 삶을 기리고 받들은 직금의 이념적 혼란과 다소의 패배적 분위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전 삶을 관통함 들직한 밑둥 하나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최 진 아
〈총민주동문회 홍보부장〉

한주메모

▲28일—부산행 무궁화호 구포역 부근서 전복, 79명 사망 1백20여명 부상

—정부, 상여금 시간외 수당 근로소득세 면세 추진 발표.

▲29일—박준규의장 의원사퇴 압력에 반발해 탈당. 김재순 전의장은 정계은퇴선언. 김문기의원 부동산 투기 대학공금유용 혐령으로 구속

—검·경수사관 열차전복 중간수사 발표, "발파충격 지반침하탓". 사고전 3차례 토사 대량유출 확인돼.

—안기부조직축소, 정치사찰부 완전폐지. 판단국 정보분석기능 논란불씨 남아. 국군기무사도 정보처 없애, 민간단체 출입금지 인원축소

▲30일—정부, 종군위안부 생활보호법 추진. 일본정부에 진상규명은 계속적으로 촉구방침.

▲30일—여권재산과문 조기 매듭. 민자정중호의원 제명, 5명은 경고, 철도청장등 차관급 5명 사표수리.

—한승주 외무장관, 미(美)신문 회견서 "북한 핵사찰 수용하면 비군사실도 사찰용의" 반대급부 5개항제시.

—국방부 병무제신책발표, 사회봉사로 군복무 대체, 늦어도 내년시행. 방범·소방·공해방지 등 말계, 특례는 폐지.

▲31일—통계청 발표, 2월 실업률 3년만에 최고 3-4%기록, 생산부진추세 지속

—30대 재벌 월말계수조작 편법대출, 한도액 9%이상 초과.

—엘친, 독자적 국민투표강행 태세, 개혁파도 반대많아 실시불투명. 의회, 국민투표결의안 실시위해 예산편성, 첨예화될예정.

▲4월1일—5대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총자산 98조… 30대그룹의 55%차지.

—추곡수매량 대폭 축소, 6백만섬으로.

—3월 소비자물가 치솟음, 1.3%올라 한달 상승률 5년만에 최고.

—김대통령, 정치관련법 월내 개정키로 발표, 여·야 동등입장서 국정논의 토록.

▲2일—올 임금인상 4.7%~8.9%타결.

—엘친, 별도 국민투표 제휴 취소, 의회투표안 '정족수' 위헌심사 요청키로.

—엽 병무청장 재산은폐 의혹, 안기부때부터 개인안가 운용.

—임시부정 학부모 4명 실형 선고.

▲3일—정부, 수방·특전사령관 전격 경질, 후임에 도일규·장창규준장 임명. 군 6월 정기인사 앞당겨질 가능성.

—유엔 안보리, '북한핵'대응 착수 내주초 결의안 마련될 듯.

—국방부, '신한국 창조를 위한 5대 개혁과제'발표. 국방예산공개, 비군사경비 대폭삭감.

—정부, 올 예산 1조5천9백억원 절감 확정, 생필품 인상 1%내, 정부미 방출가 동결.

현장 취재

"목마른 사학재정, 이대로 둘 수 없다"
— 교육부 항의방문을 다녀와서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경기대 민주광장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소속 8백여 젊은이의 하나된 목소리가 우렁차게 터져나오고 있었다.

"대학교육을 살리자"

상지대의 재단 이사장인 김문기 의원의 부정입학과 부동산 투기에 관련한 각종비리가 지난 29일 드러나면서 매년 똑같은 양의 재단전입금과 사학예산의 1%수준인 국고보조금 사이에서 곪을대로 곪은 사립대학의 현실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한총련은 GNP대비 4% 교육재정 93년 조기확충과 사립학교법 개정, 기부금입학제 도입의 철폐를 내걸고 교육부 항의방문을 결행한 것이다.

경기대 교문을 나서자마자 부딪친 7개중대의 전경과 백골단, 방패와 방독면은 굳게 닫친 대학교육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했다.

이후에 파고다 공원에서 다시모여 시도한 평화행진과 전국대학생들의 서명에 기반한 집단민원조차 강제연행이라는 결과만을 낳은 상황에서 몇몇 시민들의 걱정어린 주시만이 유일한 관심이고 지지였다.

〈박경희 記者〉

시사상식

◇…호주제도

개정법 호주상속권포기 인정

호주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민법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1989년의 민법개정 이전에는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를 금지하고 입양을 금지하며 호주상속권의 포기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사망후에도 가계를 잇기 위하여 사후양자제도와 유언양자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여자에게까지 호주상속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을 금지하고, 입부혼인에 의하여 가계를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호주제도는 유교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행된 지본주의와 도시화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부부중심의 핵가족화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1989년에 민법의 일부개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원래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그 유지를 위한 규정 중 입부혼인을 계의하고 모두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女)호주가 가(家)를 계승하기 위해서 남자의 입적으로 호주에서 가족원이 되도록 하는 규정, 실효성이 없는 호주의 부양의무 규정과 거소지정권규정, 호주의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권규정, 처의 직계비속이 부가(夫家)에 입적할 때, 부가(夫家)의 호주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그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던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모두 삭제함으로써 호주의 지위를 사실상 공허하게 하였고, 호주상속권 금지규정을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가부장적 요소를 많이 완화시켰다. 이제 민법상의 호주는 완전히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지금은 호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실무면에서도 필요없는 절차를 많이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의 괴리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가족구조가 부부와 그들의 자(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전통적인 친족간의 연대의식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부양 등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 사이에 있어서 개정민법에서 구현한 남녀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뛰어 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 재 정
〈대학원박사과정·법학〉